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요약)

-스페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사회적 경제 정책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오지영

1. 서론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3.7백만개, 99.9%)나 고용(15.5백만, 89.8%) 측면에서나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특히 최근의 저성장이나 고용 불안 극복을 위한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으며, 특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중소기업 정책 전반과 사회적 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스페인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현황

스페인은 중소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유럽연합의 상시 근로자 기준을 따른다: 마이크로 기업(1~9인), 소기업(10~49인), 중기업(50~249인).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 고용 담당 비중은 65.9%이며, 전체 부가가치 중 60% 이상을 창출하고 있어 경제에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유사 조직, 공제조합,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회사, 특수고용센터 등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은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약 4.2만개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형태는 협동조합으로 약 2만개이다. 이 조직들이 창출한 직간접적인 일자리는 약 2백만개인데, 일자리의 80% 이상이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고용의 질도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페인 GDP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며, 고용의 12.5%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인구의 4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경제에 관여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시성도 매우 높다. 반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4%에 불과해 스페인이나 EU 평균(6.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스페인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정책 현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등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3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성장(Scale-up) 기업 성과는 우수한 편이다. 유럽연합의 성장 기업은 2016년 기준 약 18만개인데, 이 중 9%가 스페인 기업이다.

스페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최근 기업가 정신 함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관련 자금, 교육,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식이나 기술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혁신 기업 간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높았던 만큼,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 제 129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의무에 따라 1999년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외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포괄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2011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더해, 2020년에는 기존 노동사회보장이민부를 노동및사회적경제부로 개편하였다. 기존에도 고용부가 사회적 경제 업무를 담당했으나 부처명에 이를 명시한 것은 최초이며, 이는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처 간 업무의 조정이나 자문, 협의 기구로는 사회적 경제 진흥 위원회를 두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2018년 수립한 '스페인 사회적 경제 전략 2017-2020'에서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영세기업으로 보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업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고, 도태 위기에 처한 사회적 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문 등 정부 차원의 도움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디지털화 촉진, 사회적 경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시성 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즉 가시성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프라 중 하나로써 통계와 정보, 성공 사례 등 데이터의 축적이 중요하다. 현재에도 법적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통계는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등 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소셜벤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 개념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 등 통계는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한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 및 생존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우수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스페인이 국가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연령별 교육 과정에 관련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것처럼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 사회적 경제 관련 컨트롤 타워 마련

현재는 각 부처별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관련 대책도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는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고, 책임감이나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8년 기획재정부 내에 사회적 경제팀이 신설되었지만, 향후 부처 간 융합과 조정, 연계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 움직임을 포괄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사회적 경제는 여타 정책보다도 지역 및 시민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경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있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실질적인 협업을 이뤄가야 한다.